

현안연구 2023-18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

최길수

<차 례>

I. 연구의 개요	1
II.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체계	2
1) 추진체계	2
2) 정부별 지역균형발전 정책	4
III. 해외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사례와 시사점	9
1) 주요 선진국 지역균형발전정책	9
2)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0
IV.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14
1) 추진체계 개편의 필요성	14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통합특별법(안)	17
3) 기회발전특구(ODZ) 도입	17
V. 대전·세종시 주도의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	20
1) 지역주도의 전략 수립	20
2) 충청권메가시티 추진	20
3) 충청권 기회발전특구(ODZ) 공동 대응 T/F 구성·운영	22
4) 대전·세종 대선 지역공약 공동 대응 T/F 구성·운영	22
4)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운영	23
<부록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24
<부록 2>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25
<부록 3> 권역별(메가시티) 현황자료	26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자치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

- 우리나라 지역균형정책은 주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산업, 교육, 광역교통 및 시설입지 등의 측면에서 보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및 비효율 초래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적정규모(critical mass) 확보를 통한 집적경제 달성이 요구되며, 산업 연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광역단위에서 산업육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
-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정주환경 질 개선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광역 및 초광역 협력)

□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격차 심화

-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면서 어느 도시(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부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 산업은 쇠퇴하고 인구 및 산업은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쏠리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지역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은 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안에 228개 시·군·구 중에서 39% 8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예정이라고 예측함
-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낙후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함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

- 새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관련 지역균형발전 법률과 지역정책이 바뀌어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짐

-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이전 정부 지역정책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히 정책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악순환 반복
- 규모가 큰 국가사업은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이를 추진할 예산 부족 및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중앙정부 주도 문제해결의 한계

-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제 122 조와 제 123 조에 명시된 기본 가치이지만 지역 간 격차는 확대·심화됨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이라는 점에서 드러나듯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재원이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됨. 이로 인해 지방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창의적 지역발전 저해함
- 중앙정부 주도로 세워진 광역단위 발전비전과 목표에 대한 지역 내부 및 지역 간 합의 부재로 지속적인 추진력 상실
-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사업들이 부처별 칸막이식 사업이 추진, 권역 내 소지역주의 대두 등으로 정책 효과는 반감
-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광역 협력 거버넌스를 조율하고 주도할 기구들의 기능과 위상이 취약

II.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1) 추진체계

□ 명칭의 변화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는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
- 위원회 개편에 따라서 시·도의 전담부서 체계도 ‘지역혁신협의회’(노무현 정부), ‘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자문단’(이명박 정부), ‘생활권발전협의회’(박근혜 정부), ‘지역혁신협의회’(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할 예정임

□ 추진체계의 변화

- 노무현 정부는 처음으로 지방차원의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도입
-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의 전담 조직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시·도간 불협화음
- 박근혜 정부 추진조직은 지역발전위원회와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가 있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미약하여 부처 간 정책조정과 지역발전 지원에 제한적
-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추진체계와 유사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표 1] 역대정부별 지역발전정책 변화과정

구 분	노무현(03~08)	이명박(08~13)	박근혜(13~17)	문재인(17~22)
정책목표	지역산업화 활성화와 균형발전 대안, RIS구축, 산업클러스터 강화 국가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지역 경쟁력 제고	주민(생활)체감형 지역발전 주민체감 지역발전	저성장, 양극화 극복 4차산업혁명대응 국가균형발전 분권, 포용, 혁신
프로그램	9개 지역 1단계 4개 지역 2단계 전략산업, 특화산업 공공기관 이전	광역선도사업/광역경제권(5+2)/POST 4+9 지역 선도사업/ 전략사업/ 연고사업	지역행복생활권(56) 시·도 특화발전 경제협력권 주력산업/ 협력산업/ 연고산업	지역인재양성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혁신 사람/ 공간/ 산업
정책수단	수도권 규제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 수도권 규제 완화	규제개선	규제개선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산업	시도별 2-3개 시도별 4개(균특법)	권역별2개(1단계) 권역별1개(2단계)	시·도 주력산업 5개 시·도 협력산업 2~3개	대표 중견기업 선정·육성 6대 혁신 산업분야 14개 협력프로젝트
핵심재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추진체계	(중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앙)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중앙)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지역)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지역)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중앙) 지역발전위원회 (중앙) 지역발전기획단 (중앙) 지역발전지원단 (지역)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지역) 시·도 발전협의회	(중앙) 지역발전위원회 (중앙) 지역발전기획단 (중앙) 지역발전지원단 (지역) 시·도 발전협의회	(중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앙)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중앙)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지역)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지역)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출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천과 발전(재구성)

2) 정부별 지역균형발전정책

□ 주요 지역균형발전정책

- 참여정부 이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철학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함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세종시의 건설, 혁신도시의 조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설치 등 명시적인 공간분산전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됨
-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 추진,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등 각 정부마다 새로운 지역정책 의제들이 등장
-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지역혁신 틀을 계승 및 복원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 참여정부 정책성과 및 한계

-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책 추진
- 수도권에 인구, 권력, 경제, 자본, 정보 등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과밀로 인한 집적의 불경제가 발생하고, 비수도권은 지역발전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국토의 고비용 저효율이 심화됨
-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은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고 선진국 진입에도 주요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참여정부는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목표로 '다핵형·창조형 선진국가 건설(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정책 등을 추진함
- 참여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추진체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위원회, 5개년계획, 특별회계)를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발전을 우선하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합의 도출하고 실행
-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인구(2002년 47.1%, 2006년 48.7%)와 산업(총사업체 비중, 2002년 45.6%, 2005년 46.6%)의 집중현상이 지속되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의 부재는 한계로 작용함

□ 이명박 정부 정책성과 및 한계

-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에 주목함.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 FTA 확산 등으로 지역 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역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매우 취약함

- 국내 지역들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은 기존 행정구역(시·도, 시·군·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분산·중복 투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소지역주의와 인접 지역 간의 연계·협력 부족
-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구역보다 규모가 큰 광역권에서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네트워크의 경제(Economy of Network) 추진
-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목표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 극대화,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 추진
-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소위 ‘3 차원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함. 광역경제권정책은 7 개(5+ 2)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도산업의 지정 및 인력양성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생활권정책(163 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 초광역 개발권 정책, 7 개(4+ 3) 초광역 벨트를 대상으로 대외개방형 지역발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 간에 상호 보완적 추진
-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구역에 고착된 소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광역권 정책의 도입 및 행정구역을 넘어선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발전기금의 도입, 지방재정의 확충(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과 자율성 제고(포괄보조금)
- 5+ 2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시·도지사들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제한된 권한과 역할은 광역권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함

□ 박근혜 정부 정책성과 및 한계

- 2013 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에 경제적·삶의 질 측면에서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질은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시급한 지역 문제로 인식
- 1960 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과 행복지수(OECD 38 개 국가 중에서 28 위, 2016 년)가 낮은 상황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

- 박근혜 정부는 지역문제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정책의 목표로 ‘국민행복,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등을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정책은 실제 생활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복 증진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에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 간 연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촌 및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역점
- 박근혜 정부는 정책의 주체 및 수혜자인 ‘주민의 번영’(People Prosperity)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63개 생활권의 구성과 지역 간 협력사업(교육, 의료·복지, 환경 등)을 추진한 점은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음
- 생활권 정책은 행정의 공감대와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삶의 질 및 주민 행복 등 주관적 요소가 포함된 정책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문재인 정부 정책성과 및 한계

-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가치를 분권, 포용, 혁신 3가지로 집중하여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시함
-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사람전략),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공간전략), 일자리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전략)이며,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 제시
-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사람전략)의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공간전략)의 핵심과제는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전환
-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전략)의 핵심과제는 혁신도시 시즌 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하고,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혁신도시의 주거환경 인프라 개선

- 문재인 정부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관련법 상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 협의회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의 평가, 협의 기능 강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혁신협의회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심의에 중점을 둔 역할에 머물러 있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역혁신추진기구로서의 기능은 미흡
- 한국판 뉴딜(지역균형뉴딜)과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사업,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함
- 2021년 10월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는데, 2022년 6월 1일 전국지방선거 이후 시·도 자치단체장이 바뀐 지역을 중심으로 신중론과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면서 중단됨
- 정권 후반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메가시티(특별연합)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정권교체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인해서 동력을 상실함

[표 2] 역대 정부별 공간정책 및 기능

구분	공간정책 및 사업	주요기능
참여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NURI 사업 및 신활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혁신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 협의·조정 •그 밖에 의장 부의사항
이명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 광역경제권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강원권, 제주권) •초광역 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광역연계협력사업 및 선도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광역경제권내 시·도간 협력 사업 발굴 및 재원분담 논의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평가
박근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지역생활권 등 •전국 63개 지역생활권 구성 •생활권 선도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발전계획의 수립과 심의 •행복생활권 구성·운영 •행복생활권 사업 발굴·점검 및 관련 갈등 조정
문재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초광역권 등 •광역권 메가시티 •초광역협력프로젝트 추진 •에타면제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발전계획의 수립과 심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심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심의

Ⅲ. 해외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사례와 시사점

1) 주요 선진국 지역균형발전정책

- 1980년대 이후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을 완화하고,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 추진
 - 수도권정책은 대도시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발전 정책은 지방 스스로의 정책 및 사업기획 등 분권시스템으로 전환
 -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중요시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수도권규제 완화와 함께 중심시가지 활성화정책, 도시재생정책 등 병행
-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마련하고, 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 지원
 - 지역발전을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자립경제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구(RDA)」, 「중심시가지활성화법」, 「SRU(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법」 등을 설치·제정하여 지방 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3 개국은 세계 메가시티(megacity)와의 도시경쟁력 순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자국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에 반영
 - 영국의 경우 런던지역의 인구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도시로서의 런던이 가져야할 역할 제고
 - 프랑스의 경우 일드 프랑스 지역의 입지규제를 폐지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도시 지구 개발 계획(Grand Paris Plan)을 추진

2)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사례

□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1960년대~1980년대)

- 1960년대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이 시작되면서 산업이 집중되는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과의 소득 격차가 확대
- 소외 지역의 불만 해소의 일환으로 1962년 ‘제 1차 전국종합개발계획’ 추진
-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기본 목표로, ‘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이 제정되어 주로 지방권에서 임해공업지대 등의 공업개발 거점 정비가 추진
- 예상을 웃도는 고도 성장 아래 대도시로의 인구, 산업의 집중이 지속되는 반면 지방의 농어촌에서는 과소 문제가 발생
- 1969년 책정된 ‘제 2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은 개발가능성을 전 국토로 확대하여 일본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총 130~170조엔 투입
- ‘제 2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이 책정된 뒤 출범한 ‘다나카 내각’은 1972년 ‘일본 열도 개조론’을 바탕으로 과밀·과소의 해결을 바라는 일본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고자 도시 집중의 분산을 적극 추진
- ‘제 2차 전국종합개발계획’과 ‘일본 열도 개조론’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공해 문제 및 오일쇼크로 인한 건설 착공 지연 등을 재검토하고 거주 환경의 조성 계획을 반영한 ‘제 3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이 1977년 확정
- ‘거주 환경의 종합적 정비’를 기본 목표로 내걸고 대도시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는 반면 지방을 발전시키고 과밀·과소 문제에 대처하면서 일본 전역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주구상’ 추진하였으며 1986년부터 1998년까지 370조엔 투자
- ‘정주구상’ 추진 구조로 제시된 ‘정주권역’을 전국에 약 200~300여개를 상정하여 광역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 자연환경, 생활환경, 생산 환경을 일체로 정비
- 이전의 계획과 달리 지방공공단체의 주체성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자주적인 활동을 중시하여,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나 국가에 의한 새로운 지역개발 및 입법·지역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주적인 지역조성의 활발해진 시대 흐름에 맞물려 1975년~1980년의 5년간 도쿄를 제외한 46개 도도부현이 모두 인구 증가 기록

[표 3]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1960~1980)¹⁾

구분	제1차 전국토개발계획	제2차 전국토개발계획	제3차 전국토개발계획
시기	1962년 10월 5일	1969년 5월 30일	1977년 11월 4일
내각	이케다 내각	사토 내각	후쿠다 내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성장경제로의 이행 국민소득증가계획 비대화 도시 문제 발생 국민간 소득격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성장경제 인구·산업의 대도시 집중 정보화, 국제화, 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성장경제 인구산업의 지방 분산 조짐 자원, 에너지 등의 유한성 표면화
목표 년도	1970년	1985년	1987년
기본 목표	<p><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도시 비대화로 인한 생활·생산에서의 문제, 지역에 따른 생산성 격차에 대한 종합적 해결 도모</p>	<p><풍요로운 환경의 창조> -기본적 과제의 조화로 고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인간을 위한 풍요로운 환경을 창조</p>	<p><거주기반의 종합적 환경 정비> -국토 자원의 지역특성을 살리며 역사적·전통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거주 환경의 종합적 계획 정비</p>
기본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비대화 방지 및 지역격차 해소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자본, 노동, 기술의 지역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의 영구적 보호·보존 개발 기초조건 정비를 통한 일본 전역 개발가능성을 균형화 지역특성을 살리는 국토 이용 안전·쾌적·문화적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환경의 종합적 정비 국토의 보전과 이용 경제사회의 새로운 변화 대응
개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공업의 분산 도쿄 등 기존 대집적 도시와 연결되는 개발거점을 배치 교통·통신 시설을 조성하여 주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연쇄 개발이 가능한 균형 발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칸센, 고속도로 등의 네트워크를 정비하여 국토 이용의 편재를 조정하여 과밀·과소·지역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 인구·산업 집중 억제 지방을 진흥시키고, 과밀·과소 문제에 대처하면서 전 국토의 이용 균형을 도모하는 종합적 환경 형성

출처 : 国土交通省. '全国総合開発計画 (概要) の比較' (재구성)

1) 「21世紀の国土政策は何を目指すか, 国土の均衡ある発展に代わる国土政策の理念を模索する」, 都市研究センター 研究理事 大木 健一

「地方創生とは? 取り組み事例やSDGsとの関わりもご紹介」, TURNS, 高田裕美

□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1980년대~2019년)

- 1980년 중반에 이르러 대도시권 중 특히 도쿄권에서만 고차원 기능의 집적과 인구 재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쿄권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지방권에서는 엔고불황과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고용문제 심화
-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 책정된 ‘제 4 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은 도쿄집중 현상 방지와 ‘다극분산형 국토 구축’을 기본목표로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약 1,000조엔이 넘는 규모의 재정 투입
- 이 시기에 종합보양(保養)지역정비법(1987년),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1988년), 지방거점법(1992년) 등 새롭고 다양한 지역개발법이 제정됨
- 1990년대에는 경기대책, 내수확대를 목적으로 공공투자기본계획(1990, 1994년)에 기초한 공공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져 지역 간 소득격차는 축소되고 인구의 수도권(도쿄) 집중도는 완화됨
- 1998년은 ‘제 5 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이 책정되었으며 ‘다축형(多軸型)국토구조의 기초 조성’과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연계 방안 제시
-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 사회에 돌입한 일본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꾸준히 이어지는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소멸 위기 지자체’의 증가 등에 직면
- 2014년 제 2 차 아베 내각은 일본 전체의 활력 향상과 각 지역의 특징을 살려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창생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지휘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본부」를 창설
- 정부 관련 기관의 일부를 지방 도시로 이전을 시키거나, 도쿄 23 구내에 있는 사립대학의 정원증가를 10년간 허용하지 않는 법령 제정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전개하는 이주·교류 시책에 대해서 특별 교부세에 의한 재정 조치를 강구하여 ‘지방 창생 추진 교부금’, ‘지방 창생 거점 정비 교부금’ 등을 통해서 연간 1,000억엔이 넘는 교부금 분배

[표 4]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1980~2019)²⁾

구분	제4차 전국토개발계획	제5차 전국토개발계획	지방창생정책
시기	1987년 6월 30일	1998년 3월 31일	2014년 12월 27일
책정 내각	나카소네 내각	하시모토 내각	아베 내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기능의 도쿄 집중화 •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지방 고용 문제 심화 • 본격적인 국제화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환경문제, 아시아 국가와의 활발한 교류 시작 • 인구 감소·고령화 시대 • 고도 정보화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 •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 소멸 위기 지자체의 증가
목표 연도	2000년	2010~2015년	2019년
기본 목표	<p><다극 분산형 국토 구축></p> <p>-특색있는 기능을 가진 권역을 구축하여 인구나 경제·행정 기능 등이 한 지역으로의 과도한 집중 없이 지역 간 서로 보완 교류하는 국토 형성</p>	<p><다축형 국토구조 형성의 기초조성></p> <p>-다축형 국토구조의 형성을 목표로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실현의 기초를 구축</p>	<p><지역의 특징을 살리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p> <p>-일본 전체의 활력 향상을 목표로 새롭고 보다 풍요로운 일본의 미래상의 기초 구축</p>
기본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과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 국제화와 세계 도시 기능 재편성 • 안전하고 질 높은 국토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 가능한 지역 창조 • 국토의 안전과 생활의 안심 확보 • 자연 환경의 향유와 계승 • 활력 있는 경제사회 구축 • 세계에 열린 국토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일자리 창출 • 지방으로의 이주 적극 도모 • 결혼·출산·육아 지원제도 확립 • 지역 간 연계 사회 구축
개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창의적인 연구 • 중앙정부의 선도적인 지원에 근거하여 전국의 교통·정보·통신체계 정비 추진 •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국가, 지방, 민간 단체의 연계를 통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연 거주지역(소도시·농산어촌·중산간지역 등) 창조 • 대도시 공간의 복구·갱신·유효 활용 • 통합 지역연계의 전개 • 세계적 교류기능을 가진 권역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 • 수도 기능의 이전 • 도쿄 23구 대학 정원 억제 • 산관학 제휴에 의한 지역 핵심 산업 진흥·인재육성 제도 지원 • 지방 지자체의 이주·교류 시책에 대한 지원

출처 : 国土交通省, '全国総合開発計画(概要)の比較'(재구성)

2) 「21世紀の国土政策は何を目指すか, 国土の均衡ある発展に代わる国土政策の理念を模索する」, 都市研究センター, 大木 健一

「地方創生とは? 取り組み事例やSDGsとの関わりもご紹介」, TURNS, 高田裕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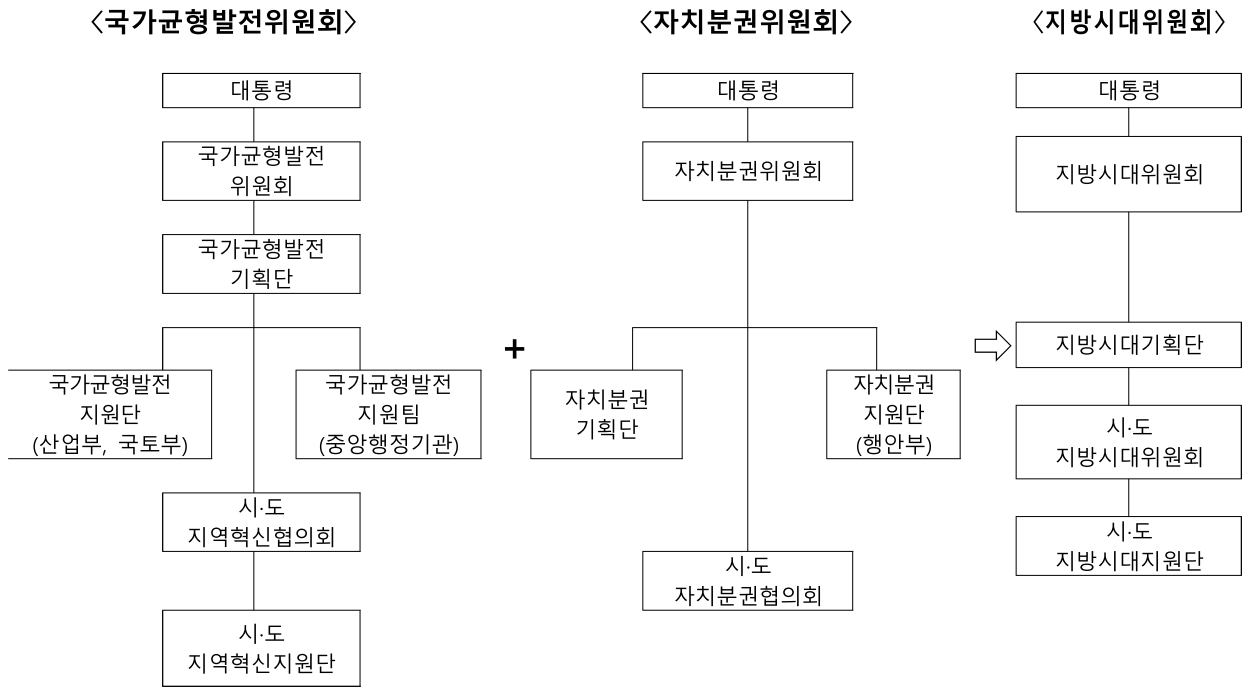
IV.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1) 추진체계 개편의 필요성

□ 지방시대위원회 위상강화 필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됨
-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업무나 관련사업 등을 지방시대위원회로 모두 이관해야 됨
- 국토부는 혁신도시, 산업부 지역산업, 기재부는 예산을 짊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부처 간 칸막이를 폐단을 말하면서 여전히 부처이기주의가 존재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사업과 규모를 확대하고, 초광역협력계정 신설과 국고 보조율을 상향해서 지원해야 함
- 특히 지방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낙후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 정부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지방시대위원회 내부 별도의 연구조직(부서)이 필요함
- 가칭 ‘지역균형발전연구실(부)’를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피드백하는 전문성 있는 연구조직으로 육성해야 됨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명실상부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단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함
- 통합특별법에 수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 설치·운영’에 따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함
-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종합적 관리 및 운용 권한을 부여해야 함
-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통합한 ‘자치발전비서관’을 신설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분권균형발전수석’을 두는 방안을 강구해야 됨

[그림 1] 추진체계의 변화(균형위+분권위→지방시대위원회)



[표 5] 추진체계의 구성 및 기능

구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기간	없음	5년('18.3.20.~'23.3.19.)	5년(시행일로부터)
구 성	<p>위원장 1명 포함 34명 이내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 15명 (기재부 등 13개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구청장협의회장) - 위촉직 : 18명(시도지사협의회 추천 등) 	<p>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 위원구성</p> <p>*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으로 하며, 부위원장1명은 행정안전부장관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 3명(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 : 24명(대통령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자치단체 장 등 협의체 추천 8명) 	<p>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9명 이내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 16명(기재부 등 중앙부처 장관* 13명,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 2명) * 기존 균형위 당연직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제외, 고용노동부장관 신규 포함 - 위촉직 : 21명(국회의장 추천 4명 등)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 국가균형발전계획·시책 등 사업의 분석·평가·조정 - 국가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조정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 -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입지 결정 -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준·조정 등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통합특별법(안)³⁾

□ 주요 내용

- 정부는 23년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함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됨
-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분리되어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미흡하였으나,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게 됨
 - (주요 시책)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
 -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하기 위해 기회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는 관련 조항에서 제외됨)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함

[표 6] 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구분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성격	■대통령 소속 자문위	■대통령 소속 자문위	■대통령 소속 자문위
위원	■27명 -위촉직 24명 -당연직 3명 ※ 임기 2년	■34명 -위촉직 19명 -당연직 15명 ※ 임기 2년	■33명 -위촉직 17명 -당연직 16명 ※ 임기 2년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2023.5.25.)

구분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직	※ 위원장 1명(위촉위원), 부위원장 2명 (위촉위원, 행안부장관)	※ 위원장 1명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모두 위촉위원)
	■24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자체장 등 협의체 대표자가 2명씩 추천하는 8명	■19명 - 지자체 협의체 대표자가 추천한 자 - 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非 수도권에 주소를 둔 자	■17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非 수도권에 주소를 둔 자
당연직	■3명 - 기재·행안부장관, 국조실장	■15명 -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여가·국토·해수·중기부장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協 대표자	■16명 -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조실장 - 시도지사·시군구청장協 대표자
존속기간	■5년(18.3.20.~ 23.3.19.)	■없음	■5년(시행일부테)

-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3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16*+ 위촉 17)
 - *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 ▷ 여가부장관,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보좌하는 수석보좌관 등 유관 중앙행정기관장은 필요시 회의에 참여 및 의견 개진 가능
- (심의·의결)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 총괄·점검 및 지원 등
- (보고·점검)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무회의에 결과보고, 필요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에서도 추진상황 점검 가능
- (균특회계)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시대위원회를 7월 중에 공식 출범함으로써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됨

3) 기회발전특구(ODZ) 도입

(1) 개념 및 특징

- 파격적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특례로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ODZ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
- 파격적 세제 혜택으로 기업이전 건인

○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과 법인세의 획기적 인하 등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체감할 만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통해 개인과 기업 적극적 지역 이전 유도

□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지방이 특화 모델과 규제특례를 제공

○ 중앙의 하향식 특구개발이 아닌, 지방이 실정에 맞게 중앙 지정 권역 내의 특구지역 선정, 특화산업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정부규제특례 적용 등을 주도

(2) 지원정책

□ 지방이전 개인과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 특구 내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

- 특구 이전하여 투자한 개인 및 기업이 기존 보유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이연하고 감면
-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특구 내 거주 및 경영단계

- 특구 내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도 일정기간 감면
- 특구 개발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 특구 내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각종 요건을 완화하여 명문장수기업 육성

○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

- 특구 내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상속세 감면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침없는 규제특례 적용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 및 면제, 각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규제특례를 적용

○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 중앙정부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최상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규제혁신을 적용

□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 특구 내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 산학 공동의 지방대학 특성화 및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V. 대전·세종시 주도의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

1) 지역주도의 전략수립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제적 대응

-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정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 현재까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이나 세부적 사업내용은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충청권은 정책의 경중, 정책의 시급성,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전략수립 필요
-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충청권 상생의 측면에서 과거추진사례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좀 더 진전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관점에서 진행
-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충청권 신균형발전 전략 추진
-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추가공공기관 이전)로 지역산업경쟁력 확보와 대기업 본사 충청권 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생형 기업생태계 구축
-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대비한 충청권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체제 구축

2)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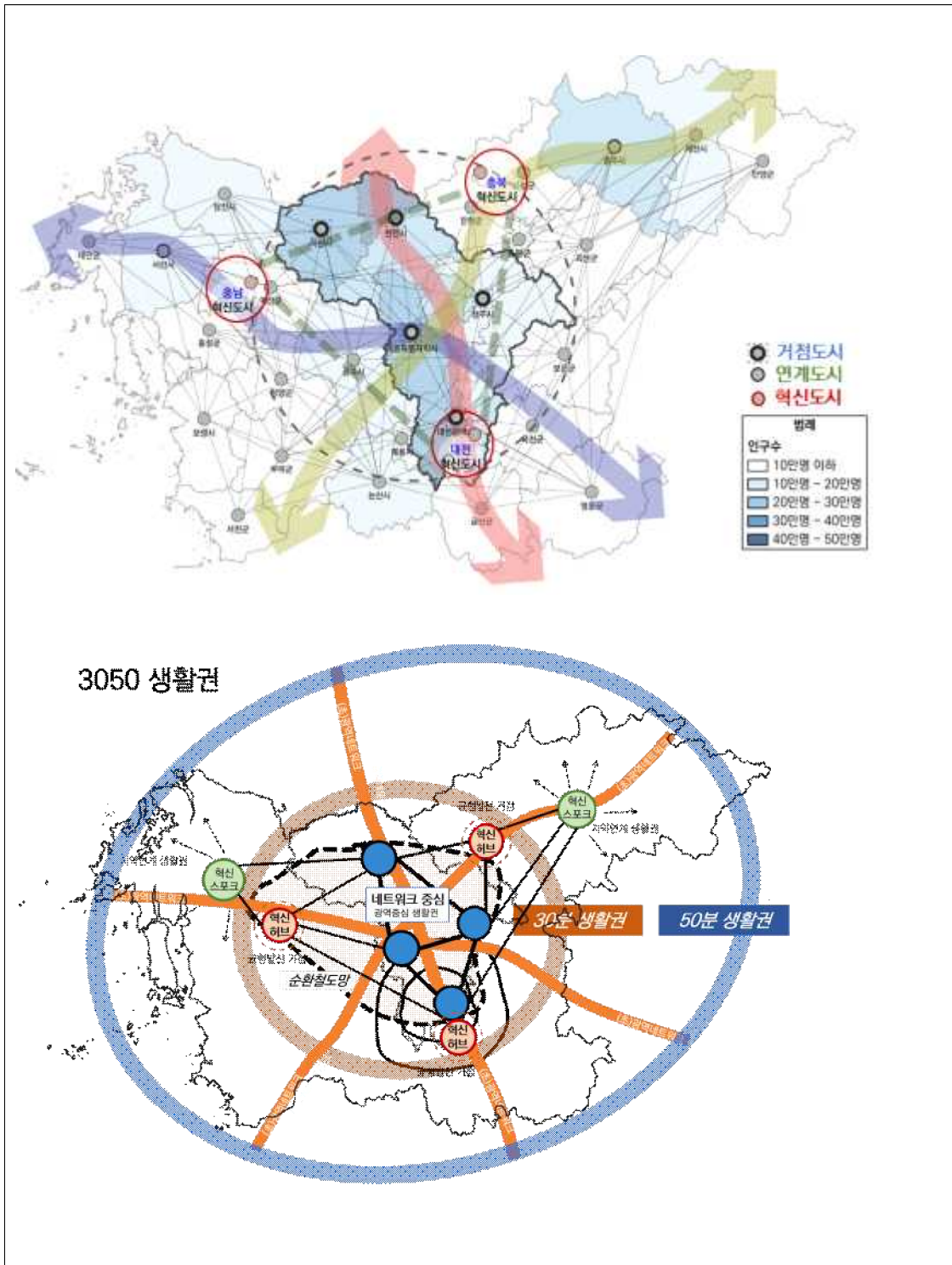
□ 충청권 광역도시간 연계

- 국가 간 경쟁보다는 도시(지역)경쟁력이 중시되는 추세이며, 도시브랜드가 국가 경쟁력 원천이 되고 있음
-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이 통합단위를 형성하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권 거점도시가 필요함
- 교통 및 통신·물류 수단 등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기능의 공간적 경계는 무의미 (광역자치단체간 연계 필요)
-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차원에서 광역철도 및 도로망, 물류 및 유통망 등 구축
- 기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협의체(광역행정 거버넌스) 강화

□ 충청권 공간적 및 기능적 연계

- 광역중심생활권(거점도시) : 충청권 네트워크의 중심지 (인구 300 만명 이상)
- 균형발전거점(혁신도시) : 충청권 혁신의 허브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 지역연계생활권(연계도시) : 충청권 혁신의 스포크(인구 20 만명 내외)
- 광역중심 생활권(거점도시: 대전-세종-청주-천안·아산) 30 분 이내 연결망 구축
- 균형발전거점(혁신도시)과 지역연계생활권(연계도시) 지역은 50 분 이내 연결망 구축

[그림2] 충청권 공간적 및 기능적 연계



자료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2021.12) 재구성

3) 충청권 기회발전특구(ODZ) 공동 대응 T/F 구성·운영

- 대전+ 세종 전략사업을 연계하여 산업 시너지 극대화
 - 대전 : 첨단국방산업, 도심항공모빌리티, 바이오, ICT 융합기술
 - 세종 : 미래모빌리티, 스마트헬스케어, 소재부품산업
- 공동 기회발전특구 조성 방안 추진
 - 충청권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연계 활용
 - 대전 나도·반도체·우주항공(530 만㎡)
 - 천안 미래모빌리티·반도체(417 만㎡)
 - 오송 철도클러스터(99 만㎡)
 - 홍성(내포신도시) 수소·미래차·2 차전지(236 만㎡)
 - 대전·세종·충남(공주) 기회발전특구 조성
 - 메가시티 및 행정구역이 인접한곳에 국가산단 조성
 - 대전 기회발전특구 조성
 - 나도 반도체 국립연구원 설립
 - 소재부품 장비 테스트 베드 구축
 -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 대전 도심항공모빌리티 단지 조성
 - 세종 기회발전특구 조성
 - 사이버보안 분야 기회발전 특구
 - 실감형 콘텐츠·메타버스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자율주행과 드론 등

4) 대전·세종 대전 지역공약 공동 대응 T/F 구성·운영

- 대전,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시
 -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 원주(의료헬스), 충주(2 차전지), 오송(바이오), 청주(시스템반도체), 대전(정보통신), 천안(디스플레이), 세종(미래차), 논산(첨단국방), 익산(식품기술), 전주(탄소융합)
 - 광역 교통망 확충 : 대전·세종·충남·충북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호남고속도로(대덕구 회덕 JCT~서구 서대전 JCT 구간) 확장
 - 경부선·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 : 경부선 13 km, 호남선 11 km)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방위사업청 이전 : 대전의 첨단국방산업, 도심항공모빌리티, 바이오 ICT 융복합기술과 세종의 미래모빌리티, 스마트헬스케어, 소재부품산업등을 연계
 - 제 2 대덕연구단지 조성 : 유성 북구권에 제 2 대덕연구단지 조성

- 산업단지 첨단화·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 메모리얼 광장, 호국보훈거리, ICT 체험관, 메타버스 추모관 등

□ 대한민국의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 대통령 세종 제 2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 대통령 세종 제 2 집무실 설치·운영, 국회의사당 조기 건립(상임위 이전) 및 언론등 유관기관 이전 추진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 대전~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대전(첨단국방산업), 세종(미래차)
-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 중부권 가속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사선의·과학융합산업 육성
-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건립 : 콘텐츠 제작·편집 및 공연등 제반시설을 갖춘 미디어 건립
- 글로벌 청년빌리지 조성 : 개방형 창업생태계 기술창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기술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
-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 대학원 중심의 세종공동캠퍼스 완성

5)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운영

□ 추진사항

-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 4 개 분과 (기획, 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48 명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촉위원 36, 시도 공무원 12 / 시도별 12 명)
- 특별지방자치단체 역할 : 협력 사업분야와 광역행정체계 기본 방향 제시 등
- '24 년 상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예정(중점사무 : 모빌리티, 바이오 등)

□ 추진방향

-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구축
-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선제적 대응
- 충청권 특성을 반영한 특별자치단체 구성·운영(고유사무 발굴 등)
-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등

<부록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p>제1장 총칙</p> <p>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시·도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초광역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p>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p> <p>제1절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체계구축 ▶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 성장촉진지역등의 개발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 혁신도시의 지정 ▶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지원 ▶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p>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p> <p>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 자치경찰제 실시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p>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p> <p>제3절 통합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p> <p>제1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p>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p>제3관 대도시에 대한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p>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p>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	---

<부록 2>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권역	추진 현황
부산·울산·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 설치·운영('21.7.~'22.10.) ·시도의회 규약안 의결('22.4.12. ~ 4.15.) ·부울경-정부부처간 분권협약 및 초광역권 발전 양해각서 체결('22.4.18.)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행안부 승인 ('22.4.19.)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경제동맹 및 행정통합 추진 발표('22.10.13.)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단 출범 ('23.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2개팀 (초광역정책팀, 초광역사업팀), 11명 (부산5, 울산3, 경남3) * (직제) 부산시 4급/ (위치) 부산시청 1층 - 역할 : 부울경 협력사업 총괄 발굴·기획·조정,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국가지원 방안 마련 및 국비 확보 등 대외 협력 사무 추진
지리산권 (남원시 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창립 ('08.11.5.) · 특별지자체 설치 관련 지자체-행안부장관 간담회 개최 ('22.2.17.) ·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을 위한 지리산권 지방의회 의장단 간담회 ('22.3.16.) · 특별지자체 설치 공동협약 ('22.10.26.) * 구성지자체 :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 전담조직: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권역	추진 현황
<p>접경지역 DMZ (용진군 외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경지역 및 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 용역 ('22.1.~9./ 한국지방자치학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안 세미나 개최 ('22.11.3.)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23.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목표로 법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합의 * 구성지자체: 용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전담조직: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p>전북 새만금 (군산·김제·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메가시티 설립 합의('22.8월, 새만금 행정협의회)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관련 용역추진중 ('22.9.~ 전북연구원) · (김제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설명회 개최('22.12.16.) ·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발족('23.3.20.)
<p>대구·경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설치·운영(행안부 승인, '22.3.~'22.7.) ·대구시 조직 개편에 따른 기획단 폐지('22.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무산, 공동사업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

<부록 3> 권역별(메가시티) 현황자료

[면적]

(단위: km²)

구분	그랜드 메가시티			경제통합형 메가시티		강소권 메가시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광주·전남	대경권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면적 (2019년)	11,861,009 (6/8)	12,372,486 (5/8)	16,656,937 (3/8)	12,846,346 (4/8)	19,916,860 (1/8)	8,069,139 (7/8)	16,828,281 (2/8)	1,850,227 (8/8)
	11.8%	12.3%	16.6%	12.8%	19.8%	8.0%	16.8%	1.8%

※ 충청권 면적은 대경권, 강원권에 이어 3위에 해당됨

[인구·고용 부문]

구분	그랜드 메가시티			경제통합형 메가시티		강소권 메가시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광주·전남	대경권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총인구(명) (2019년)	25,892,678 (1/8)	7,863,593 (2/8)	5,654,967 (3/8)	3,277,273 (5/8)	5,098,094 (4/8)	1,807,423 (6/8)	1,520,127 (7/8)	665,048 (8/8)
	50.0%	15.2%	10.9%	6.3%	9.8%	3.5%	2.9%	1.3%
취업자 수(천명) (2020년)	13,520 (1/8)	3,929 (2/8)	3,026 (3/8)	1,722 (5/8)	2,602 (4/8)	932 (6/8)	795 (7/8)	378 (8/8)
	50.3%	14.6%	11.2%	6.4%	9.7%	3.5%	3.0%	1.4%
고용률(%) (2020년)	60.3 (5/8)	58.1 (8/8)	62.3 (2/8)	61.3 (3/8)	58.9 (7/8)	59.9 (6/8)	60.8 (4/8)	67.1 (1/8)
실업률(%) (2020년)	4.4 (1/8)	4.1 (2/8)	3.5 (5/8)	3.2 (6/8)	4.0 (3/8)	2.5 (7/8)	3.9 (4/8)	2.5 (7/8)
청년층 고용률(%) (2020년)	45.5 (1/8)	38.6 (6/8)	41.7 (2/8)	38.8 (5/8)	37.9 (7/8)	31.5 (8/8)	40.8 (4/8)	41.6 (3/8)
청년층 실업률(%) (2020년)	8.8 (4/8)	10.8 (1/8)	8.0 (6/8)	7.9 (7/8)	9.8 (2/8)	9.1 (3/8)	8.6 (5/8)	6.8 (8/8)
구직급여 신청자수(명) (2020년)	712,873 (1/8)	232,882 (2/8)	127,596 (4/8)	69,160 (5/8)	128,933 (3/8)	41,997 (6/8)	40,391 (7/8)	17,885 (8/8)
	52.0%	17.0%	9.3%	5.0%	9.4%	3.1%	2.9%	1.3%

※ 충청권 인구는 수도권, 동남권에 이어 3위에 해당됨

[생산·분배·지출 부문]

구분	그랜드 메가시티			경제통합형 메가시티		강소권 메가시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광주·전남	대경권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내총생산(GRDP)(조) (2020년)	1001.4 (1/8)	280.2 (2/8)	238.6 (3/8)	118.0 (5/8)	165.1 (4/8)	51.8 (6/8)	48.6 (7/8)	20.3 (8/8)
	52.0%	14.6%	12.4%	6.1%	8.6%	2.7%	2.5%	1.1%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천원) (2019년)	37,141 (3/8)	42,150 (1/8)	39,811 (2/8)	35,436 (4/8)	32,008 (6/8)	28,740 (8/8)	32,061 (5/8)	30,720 (7/8)
	99.8%	113.3%	107.0%	95.2%	86.0%	77.2%	86.2%	82.6%
1인당 지역총소득(GRI)(천원) (2019년)	40,053 (1/8)	38,832 (2/8)	35,992 (3/8)	33,248 (4/8)	31,336 (5/8)	28,260 (8/8)	29,392 (7/8)	30,834 (6/8)
	106.7%	103.5%	95.9%	88.6%	83.5%	75.3%	78.3%	82.2%
1인당 개인소득	21,085 (1/8)	20,904 (2/8)	19,516 (4/8)	19,622 (3/8)	18,911 (6/8)	18,725 (8/8)	18,997 (5/8)	18,734 (7/8)
	103.4%	102.5%	95.7%	96.2%	92.7%	91.8%	93.1%	91.8%
1인당 개인소비	18,580	17,646 (2/8)	16,657 (7/8)	17,168 (3/8)	17,034 (4/8)	16,022 (8/8)	16,811 (6/8)	16,953 (5/8)
	103.4%	98.2%	92.7%	95.6%	94.8%	89.2%	93.6%	94.4%
수출액(백만달러)	206,190 (1/8)	103,304 (3/8)	110,760 (2/8)	40,864 (5/8)	43,361 (4/8)	5,842 (6/8)	2,023 (7/8)	155 (8/8)
	40.2%	20.2%	21.6%	8.0%	8.5%	1.1%	0.4%	0.0%
수입액(백만달러)	316,026 (1/8)	58,149 (2/8)	38,259 (3/8)	29,501 (4/8)	17,442 (5/8)	4,772 (6/8)	3,149 (7/8)	336 (8/8)
	67.6%	12.4%	8.2%	6.3%	3.7%	1.0%	0.7%	0.1%

※ 충청권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도권, 동남권에 이어 3위에 해당됨

[혁신역량 부문]

구분	그랜드 메가시티			경제통합형 메가시티		강소권 메가시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광주·전남	대경권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연구개발 투자비(억원) (2017년)	541,804 (1/8)	45,869 (3/8)	129,565 (2/8)	13,424 (5/8)	40,848 (4/8)	10,322 (6/8)	4,503 (7/8)	1,560 (8/8)
	68.8%	5.8%	16.4%	1.7%	5.2%	1.3%	0.6%	0.2%
연구원수(명) (2017년)	310,759 (1/8)	41,762 (3/8)	69,317 (2/8)	12,215 (5/8)	31,116 (4/8)	9,126 (6/8)	6,668 (7/8)	1,833 (8/8)
	64.4%	8.7%	14.4%	2.5%	6.4%	1.9%	1.4%	0.4%
특허 등록수(건) (2019년)	108,394 (1/8)	14,992 (3/8)	22,062 (2/8)	6,882 (5/8)	11,416 (4/8)	4,343 (6/8)	2,604 (7/8)	891 (8/8)
	63.2%	8.7%	12.9%	4.0%	6.7%	2.5%	1.5%	0.5%

※ 충청권 연구개발투자비는 수도권 다음 2위에 해당됨

[물가·금융·재정 부문]

구분	그랜드 메가시티			경제통합형 메가시티		강소권 메가시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광주·전남	대경권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소비자 물가지수 (2020년)	105.6 (3/8)	104.7 (8/8)	104.8 (7/8)	105.3 (4/8)	105.1 (5/8)	105.0 (6/8)	106.0 (2/8)	106.2 (1/8)
예금(십억원) (2020년)	1,202,055 (1/8)	170,643 (2/8)	104,055 (3/8)	53,644 (5/8)	93,913 (4/8)	38,260 (6/8)	24,940 (7/8)	10,309 (8/8)
	70.8%	10.1%	6.1%	3.2%	5.5%	2.3%	1.5%	0.6%
대출금(십억원) (2020년)	1,248,074 (1/8)	245,626 (2/8)	118,972 (4/8)	68,968 (5/8)	135,930 (3/8)	33,132 (6/8)	22,831 (7/8)	20,182 (8/8)
	65.9%	13.0%	6.3%	3.6%	7.2%	1.7%	1.2%	1.1%
지방세수입(백만원) (2019년)	51,215,737 (1/8)	12,331,254 (2/8)	8,791,443 (3/8)	4,742,672 (5/8)	7,398,871 (4/8)	2,292,195 (6/8)	2,168,668 (7/8)	1,519,568 (8/8)
	56.6%	13.6%	9.7%	5.2%	8.2%	2.5%	2.4%	1.7%

※ 충청권 지방세수입은 수도권, 동남권에 이은 3위에 해당됨

[사업체 및 산업구조 부문]

구분	그랜드 메가시티			경제통합형 메가시티		강소권 메가시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광주·전남	대경권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사업체 수(명) (2019년)	1,964,217 (1/8)	664,163 (2/8)	447,834 (3/8)	285,589 (5/8)	447,751 (4/8)	154,082 (6/8)	146,815 (7/8)	66,098 (8/8)
	47.0%	15.9%	10.7%	6.8%	10.7%	3.7%	3.5%	1.6%
종사자 수(명) (2019년)	11,622,231 (1/8)	3,426,063 (2/8)	2,474,224 (3/8)	1,406,170 (5/8)	2,117,981 (4/8)	720,052 (6/8)	670,247 (7/8)	286,304 (8/8)
제조업 사업체 수(명) (2019년)	215,828 (1/8)	76,711 (2/8)	43,003 (4/8)	23,803 (5/8)	56,586 (3/8)	13,288 (6/8)	8,889 (7/8)	2,658 (8/8)
	49.0%	17.4%	9.8%	5.4%	12.8%	3.0%	2.0%	0.6%
제조업 종사자 수(명) (2019년)	1,830,720 (1/8)	804,535 (2/8)	595,579 (3/8)	207,961 (5/8)	493,617 (4/8)	117,056 (6/8)	61,976 (7/8)	12,373 (8/8)
	44.4%	19.5%	14.4%	5.0%	12.0%	2.8%	1.5%	0.3%
서비스업 사업체 수(명) (2019년)	1,391,058 (1/8)	478,502 (2/8)	320,500 (3/8)	204,864 (5/8)	312,010 (4/8)	109,305 (7/8)	109,849 (6/8)	51,663 (8/8)
	46.7%	16.1%	10.8%	6.9%	10.5%	3.7%	3.7%	1.7%
서비스업 종사자 수(명) (2019년)	6,780,523 (1/8)	1,756,925 (2/8)	1,204,239 (3/8)	753,951 (5/8)	1,078,268 (4/8)	387,857 (6/8)	384,868 (7/8)	191,116 (8/8)
	54.1%	14.0%	9.6%	6.0%	8.6%	3.1%	3.1%	1.5%

※ 충청권 사업체수는 수도권, 동남권에 이은 3위에 해당됨

[주택·교통 부문]

구분	그랜드 메가시티			경제통합형 메가시티		강소권 메가시티		
	수도권	대경권	충청권	광주·전남	동남권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주택매매가격지수 (2018년)	103.1 (2/8)	101.0 (4/8)	100.1 (3/8)	103.4 (1/8)	95.5 (8/8)	100.1 (5/8)	98.4 (7/8)	101.1 (6/8)
주택전세가가격지수 (2018년)	98.8 (4/8)	98.6 (5/8)	99.5 (3/8)	101.2 (1/8)	94.6 (8/8)	99.6 (2/8)	97.3 (7/8)	98.2 (6/8)
주택보급률(%) (2019년)	99.2 (8/8)	110.3 (3/8)	110.2 (5/8)	110.3 (3/8)	109.4 (6/8)	110.5 (2/8)	112.8 (1/8)	109.2 (7/8)
빈집비율(%) (2019년)	5.4 (8/8)	9.2 (7/8)	10.9 (5/8)	11.5 (4/8)	9.6 (6/8)	12.6 (3/8)	13.4 (2/8)	15.1 (1/8)
1인당 도시지역면적현황 (2019년)	58.0 (8/8)	132.1 (4/8)	128.1 (5/8)	179.0 (1/8)	113.6 (6/8)	141.12 (3/8)	157.35 (2/8)	107.63 (7/8)
1인당 녹지지역면적현황 (2019년)	113.0 (8/8)	456.0 (4/8)	350.7 (7/8)	564.1 (3/8)	372.3 (6/8)	409.0 (5/8)	631.06 (2/8)	639.38 (1/8)
주차장확보율(%) (2018년)	105.1 (4/8)	92.2 (5/8)	105.2 (3/8)	87.5 (6/8)	106.4 (2/8)	81.8 (7/8)	108.2 (1/8)	61.4 (8/8)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대) (2020년)	0.43 (8/8)	0.55 (2/8)	0.50 (3/8)	0.50 (3/8)	0.47 (7/8)	0.50 (3/8)	0.50 (3/8)	0.90 (1/8)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건) (2019년)	7.7 (5/8)	9.4 (2/8)	8.2 (4/8)	9.8 (1/8)	7.6 (6/8)	7.3 (7/8)	8.8 (3/8)	6.5 (8/8)
교통문화지수(2020년)	80.5 (3/8)	79.0 (6/8)	79.5 (5/8)	80.6 (2/8)	79.8 (4/8)	75.5 (8/8)	78.4 (7/8)	83.9 (1/8)

※ 충청권 주택보급률은 강원도, 전라북도, 광주·전남, 대경권에 이은 5위에 해당됨

[환경 부문]

구분	그랜드 메가시티			경제통합형 메가시티		강소권 메가시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광주·전남	대경권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톤) (2018년)	0.7 (8/8)	1.5 (4/8)	3.5 (1/8)	1.9 (3/8)	1.4 (5/8)	0.8 (6/8)	3.4 (2/8)	0.7 (7/8)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kg/일) (2019년)	1.00 (8/8)	1.19 (5/8)	1.26 (4/8)	1.04 (7/8)	1.28 (3/8)	1.13 (6/8)	1.46 (2/8)	1.84 (1/8)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toe) (2019년)	2,507,828 (3/8)	1,722,556 (5/8)	3,078,897 (1/8)	2,901,806 (2/8)	2,422,795 (4/8)	1,665,136 (6/8)	1,287,702 (7/8)	659,220 (8/8)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2019년)	59.7 (4/8)	63.0 (1/8)	56.0 (6/8)	51.3 (7/8)	61.4 (3/8)	56.4 (5/8)	50.2 (8/8)	62.2 (2/8)
최종에너지 소비량(1,000 toe) (2019년)	57,975 (1/8)	43,582 (3/8)	47,685 (2/8)	43,487 (4/8)	25,606 (5/8)	5,527 (7/8)	5,951 (6/8)	1,541 (8/8)